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대통령의 결단

김 영 윤

대외협력실 실장

금강산에서 여성 관광객이 피격당했다는 사건을 접하고, 국회 개원연설에 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30여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당시의 상황은 위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참모와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회로 향한 차 안에서 이 대통령은 연설에 대북정책 변화와 대북 제의 부문을 과연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절대 절명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심적인 중압감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대북 제의 내용이 담긴 연설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남쪽 사람이 북측의 총에 맞아 죽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제의를 할 것임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냈다.

대북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물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도 민심을 살핀다. 아니 살펴야만 하고, 또 살필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라도 주어진 상황과 민심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작금의 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촛불 시위가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7월 12일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은 새 정부 출범이후 진행된 남북관계, 다시 말해 냉각된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개원연설에 담긴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언급을 원했을 수도 있지만, 7·4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협의의사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내 국민이 피격되었다는 중대한 사건을 보고받은 후, 혼자 내려야만 하는 결단. 그 속에는 분명히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냉각된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사고의 시간 속에서, 본인의 결단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혼자만의 고독한 결정이었다면, 거기엔 그만큼 더 대통령만 갖는 강한 진정성을 내포했을 것이다. 국회 개원연설의 내용이 북한의 구미에 맞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부 당국의 대북한 위상과 앞서 말한 다원화되어 있는 남한 사회의 시각, 즉 민심을 반영한 결과 때문일 것이다.

국회 개원연설에 「남북기본합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물론, 비핵문제가 남한 단독의 노력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회원국의 노력에 의해 진전되는 사안임을 더 잘 안다. 남한이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도, 이 문제의 해결은 이미 다른 트랙을 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북핵문제를 남북문제로 취급, 그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가 민족의 장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주도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국제사회가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개원연설에는 북한이 싫어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단어는 담겨 있지 않았다. 북한을 배려한 큰 방향전환이다. ‘비핵·개방·3000’은 이제 대통령이 그 말을 쓰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이 퇴색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북한이 화답해야 할 차례다. 북한은 국회 개원연설에 담긴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몰아쳐서는 안된다. 북한은 자신도 살고, 상대도 사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서, 상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상생의 길이다.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에서의 피격사건 해결을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관계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족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